

# 남북관계 새 전기... 박근혜 정부 '신뢰 프로세스' 탄력

## 한반도 군사적 리스크 해소

### '2+2' 상시 대화채널 가능성

### 5·24 조치, 北 미사일 등 변수

남북이 25일 새벽 판문점 고위급접촉에서 북측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서부전선 포격도발 유감 표명과 준전시상태 해제,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면서 일촉즉발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 국면에 들어갔다. 우선 '비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속담 마냥 이번 회담을 통해 군사적 충돌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정부 들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남북관계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일시적 군사적 긴장완화만 이뤄낸 것이 아니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의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반환점을 돈 상황까지 경색을 면치 못하던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같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은 많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당사자 간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일시적 협상 성과물 정도를 기대했던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공 여부를 떠나 그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으며 평화모드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이번 남북고위급접촉 합의는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일단,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낸 남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당 비서의 최고위급 '2+2 회담'이 남북 대화채널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장관급 이상의 남북 대화채널이 상시 가동되면 정치·군사 분야의 난제는 물론 교류·협력 과제도 상대적으로 쉽게 풀릴 수 있다. 게다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 대표단에

###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6개 합의내용

-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북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적십자사무협력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훈령을 보내면서 '간접대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 유용한 협상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 성공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여하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고 만일 성사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친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와 전망대로 남북관계가 장애물 없이 순탄하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대북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남북 사이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언제든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남북대화의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전례로 볼 때 북한의 핵·미사일 변수는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 화해 국면을 일순간에 대결 국면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또 우리 여론도 이번 회담 성과를 양보와 대화를 통한 것이라기보다 응징과 원칙을 강조한 결과로 보는 대북강경파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서로 넘어야 할 난제가 곳곳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북측 김양건 당 비서, 남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남측 홍용표 통일부 장관(왼쪽부터)이 25일 오전 판문점에서 '무박 4일'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 추석 이산가족 상봉 실무 작업 착수

### 한적 내달초 실무 접촉...숫자 등 논의

남북이 25일 판문점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합의하면서 다음달 추석에 이산가족들이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에는 남북이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은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다음달 초에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계부처에 대해 남북 당국회담의 의제 발굴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통일부와 적십자 등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 명절에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을 추

진하라고 주문했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곧바로 구성,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공동 보도문에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날짜를 9월 초로 명시한데다 올해 추석(9월 27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한적은 적십자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 9월 초에 만나 상봉 날짜와 방법, 상봉자 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적은 상봉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한적은 외부인사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이뤄진 인선위원회를 구성, 자체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통상 적십자 실무 접촉으로부터 상봉 성사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으로 미뤄볼 때 추석 이후에 상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관례로 볼 때 상봉 행사는 총 6일간 2박3일씩 1, 2차로 나뉘어 금강산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4년간 부정기적으로 진행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최우선 의제

### 장관급 상시 대화채널 될 듯

25일 타결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첫 번째 합의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를 한미 연합 군사훈련 혹은 5·24 대북제재 조치 등을 이유로 거부하던 북한이 당국 간 대화채널 가동에 호응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향후 개최될 남북 당국회담에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전면적 생사확인이 우선적인 의제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금강산 면회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북 간 이산가족 명단교환을 통한 전면적인 생사 확인도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남한 이산가족 6만여명의 현황을 파악해 북측에 일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측의 희망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당국

회담의 논의 주제로 꼽힌다.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북한군 총격으로 관광객 박왕자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중단됐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와 함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경원선 복원 사업 등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 당국회담의 급으로는 우선 이번 합의를 끌어낸 우리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최고위급 '2+2 회담'을 꼽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장관급 이상 남북 대화채널이 상시 가동되면 정치·군사 분야의 난제는 물론 교류·협력 과제도 과거에 비해 용이하게 풀릴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청와대가 남북 회담의 주제로 나설 수는 없다는 점에서 남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측 군 총정치국장 간 회담은 총괄회담으로 자리를 잡고, 장관급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연필뉴스

광주점	광주중앙 529-0003	서광주 383-3434	광주광산 952-3330	북광주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동광주 515-1900	광주양산 573-8900
전남권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277-8000	순천 745-3666	여수 683-1800	목포하당 285-7576	화순 371-3555	장흥 863-2600
나주	334-2727	강진 433-3100	해남 537-3100	장성 395-0007	담양 383-5811	완도 554-4545	영광 353-9500
보성	852-2892	광양 761-8900	동광양 791-0071	무안 454-0099	고흥 835-5050		